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당 대회가 지분 나눠 먹기로 대의원도 정하지 못해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박상천 공동대표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쇠고기' 팽개치고 지분 싸움

당력 결집 뒷전 노골적 밥그릇 다툼
대의원·지역위원장 선정 싸고 갈등

통합민주당이 7·6 전당대회의 결과를 좌우할 지역지원장과 대의원 선정을 둘러싸고 계파다툼이 치열하다.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향후 대책 등 정치권 차원의 민생대책이 산적해 있는데, 제 식구끼리 '밥그릇 싸움'으로 지난 2월 합당 이후 수차례 표출됐던 열린우리당계와 구 민주당계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 대의원 및 서울 성동갑 지역위원장 선정문제를 거론하며 구민주계의 좌장인 박상천 공동대표를 향해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표를 위시한 구 민주계의 계파 챙기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손 대표는 "내가 요즘 여러 사람에게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전당대회가 불과 열흘 남았는데 광주·전남지역이 아직도 시·도당 개편대회 날짜까지 못 잡고 있는 현실,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직까지도 말로만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면서 내 집만 챙기려는데 급급하고 말 다르고 속 다르다"며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당이 새로운 창당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꾸로 가게 된다"고 공격했다.

박상천 대표는 그러나 일순 표정이 굳어졌을 뿐, 직접 대응을 피하고 쇠고기 추가협상 문제만 거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열린우리당계과 구 민주당계 출신 비율을 6 대 4로 배분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인 구 민주계의 국창근 전 의원이 선정된 대의원의 면면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대의원대회가 무기연기된 상태다. 국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 민주당계에 약속한 소수계파 지분을 보장하지 않는 도당대의원 대회와 7·6 전당대회를 보이콧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광주·전남의 대의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시·도당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면 중앙당 직권상정으로 시·도당대회 일정을 잡아 강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성동갑 지역위원장 선정은 이날 표결로 결론 내려 했으나 "사전 공지가 충분치 않았고 참석자가 적다"는 이유로 구 민주계 인사들이 문제를 반발, 25일로 미뤄졌다. 현안인 '국회 등원'은 논의조차 안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쇠고기 정국 대응을 위해 당력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언제까지 지분다툼에만 힘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광주시의원 '도덕성 논란' 왜

자질 부족 인사 마구잡이 공천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성폭행 연루 의혹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원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의원들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가 개개인의 자질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의회=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K의원의 경우 앞서 지난 4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그럼에도 광주시의회는 해당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경찰이 시의회 내 K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시의회는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팔짱만 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스스로 제정해 놓은 윤리강령은 무시됐다.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들이 광주시정을 위해 정책 대안을 내놓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시의원을 뽑은 것이지 로비스트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K의원이 이번에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K의원은 복지법인 토지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채고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여성연합 등 8개 여성단체가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광주시의회는 윤리위를 열지 않았다. 시의회 윤리강령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민 대표로서 지향해야 할 품위 유지와 청렴·검소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문제= 의원들의 이러한 도덕성과 자질 시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선거 당시 사실상 일당 역할을 한 민주당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식 공천을 한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가 일방 통행식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나눠먹기, 밀실담합 폐단이 지적되고 있는 의장 선출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시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어정쩡한 행보를 취해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 지속하다 보니, 일부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이 공천되고, 집행부 감시도 허술하다"며 "민주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00만원의 진실' 법정 대공방 예고

강운태 의원 첫 공판…증인 신청만 무려 25명

4·9 총선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23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 의원은 모두 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전과 함께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제보자 서모(52)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짜맞추기식 수사가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도 ▲강 의원과 서씨가 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점 ▲강 의원 측이 요구한 현장검증을 기소한 날 오후에야 실시한 점 ▲서씨의 최초 진술 등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수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열람을 거부하지는 않았고, 증인 보호를 위해 일부 수사서류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10명, 변호인 측은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모두 25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변호인 측은 또 강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서씨의 통화내용 사실조회와 추가 계좌조회·현장검증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검찰은 강 의원이 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 현금의 발행시기에 대해 한국은행 측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2차심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초·광역의원 제명 사태 시끌

민주당, 무소속 지지 이유 56명 중징계
제명 의원들 "재심 청구 등 강력 대응"

민주당이 다음달 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4·9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광주·전남지역 기초·광역의원을 비롯한 당원 56명을 제명하는 등 무더기 중징계하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0명의 당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전남의 경우 15명이 제명되고 31명이 당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은 4·9총선 때 탈당한 뒤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지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황정호(목포 1), 강성종(신안2), 양승일(비례)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박병섭 목포 시의장 등을 제명했다.

또 해남·완도·진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록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도의원인 장일(진도 1) 의원을 제명하는 등 광역의원을 포함한 전남지역 당원 15명을 제명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기초의원을 비롯 모두 31명의 당원에 대해서도 3~7개월 동안 당원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에서는 무소속 강운태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한 10명이 제명됐다.

제명 당한 장일 의원은 "총선 당시 중앙당이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불합리한 공천을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제 와서 제명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황정호 의원도 "중앙당으로부터 최근에야 제명 통고를 받았다. 중앙당 집행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징계를 당한 당원들과 재심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앙당이 다음달 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지지 당원에 대해 초강경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강운태, 박지원, 이윤석, 김영록 등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의 민주당 복당도 난항이 예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상득·김형오 의원 내일 여수 방문

한나라당 이상득·김형오 의원 등 중진들이 오는 25일 여수를 방문한다. 한나라당 여수을지구당(위원장 심정우)은 23일 "이상득, 김형오, 윤두환, 이정현, 여상규 의원 등이 이날 여수를 찾아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현섭 여수시장을 비롯한 여수지역 상공인과 수산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 등은 이들 의원들에게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